

산자부, “기자는 일단 피하고 보자”

러시아 가스 송유관 기사 관련 사무관 전보조치 ... “징계 아니다” 해명

산업자원부가 최근 사무관 1명을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산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11월10일자로 예정에 없던 인사를 단행해 자원정책심의관실에 근무하는 사무관을 무역위원회로 전보 조치했다.

해당 사무관은 자원정책 관련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돼 인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자부 일부에서는 11월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 안 거친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징계성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스관 도입노선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판단이 마치 정부의 결정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도록 사무관이 정보를 주어 산자부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고위층이 보도 당일 해당 사무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뒤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러나 인사 조치를 받은 사무관은 취재 당시 “사무관 입장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자부가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무관의 인사조치 소식이 알려지자 산자부 부서들은 기자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꺼리는 등 언론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10일 인사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3>